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57-1호 2003년 3월 20일(목)

제목1: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 추진

농협중앙회 축산물공판장분사(분사장 이한강)가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를 위해 전국 축협조합장들의 찬성 서명을 받고 있다.

축산물공판장분사는 서명이 완료되면 출하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도축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축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에 의해 소·돼지에 한해 시장·군수가 시가의 1000분의 100이하로 세율을 정해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1백13개 도축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도축세는 4백90억원이다.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의 지난 1월 기준 두당 징수금액은 소는 3만2천6백20원, 돼지는 1천8백60원이다. 도축시 축산농가 조세부담은 서울공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도축세, 검사수수료, 등급판정수수료등을 포함, 소 3만4천7백20원, 돼지 2천7백60원이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이한강 사장은 "시장개방등으로 국내 사육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축세 세율이 높고 도축관련 각종 조세가 많아 출하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소득발생시 소득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또 "소·돼지에만 도축세를 징수하는 것을 양곡도정등 일반 농산물 가공시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축세가 보통세로 분류돼 있어 도축장 소재지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돼 사실상 축산농가가 납부함에도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축산물공판장분사는 이에 따라 국회에 국내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도축세 납부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다.

발체: 축산신문

제목2: 충남농협, 도축세 납부 폐지 요구키로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두철)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세 납부제도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시장 개방 등으로 국내 사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축세 등 도축 관련 각종 조세가 많아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 농협 차원에서 도축세 폐지를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 농산물을 가공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소, 돼지에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축산농가에서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통세인 도축세는 시·군의 일반재정에 포함돼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도축세는 소, 돼지를 도축할 때 시장·군수가 시중가의 1천분의 100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해 충남에서는 22개 도축장에서 36억원(소 19억원, 돼지 17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도내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의 경우 마리당 부과되는 도축세가 소는 4만1천500원, 돼지는 1천440원으로 주민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협회: 위와 관련 의견을 FAX로 주시기 바랍니다.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

제목3: 수입농산물 국산둔갑 '원천봉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값싼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산지표시 관리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자체 전산망에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 전국의 원산지표시 단속원이 수입농축산물 통관정보, 원산지 단속 조기경보시스템, 원산지표시 상습위반자 등을 수시로 검색·분석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 단속 조기경보시스템은 관세청의 수입농축산물 통관정보와 농림수산정보센터의 국산 농축산물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받아 중점단속 품목과 단속 우선순위를 자동 결정, 전국적으로 동시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관원은 이와 함께 점차 대형화·지능화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중앙특별단속반'을 설치해 전국의 대형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지원은 배추·마늘·당근·양파·김치 등 수입급증 품목과 쇠고기·돼지고기·고춧가루 등 취약품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발체: 농민신문

제목4: 이동방역차량 175대 지역공급

-올 가축방역사업 무엇이 달라지나-

농림부는 올해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을 발표했다. 올해 방역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는 한편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이 증액 지원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요약한다.

◆가축 예방약제 공급=닭 뉴캐슬병 예방약의 부화장 공급량이 6억마리분으로 지난해 4억마리분보다 50% 늘었다. 농림부는 지난해 부화장에 대한 뉴캐슬병 예방약 공급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부화장별 실적을 참고해 이같이 물량을 배정했다.

또 올해 광견병 미끼예방약도 지난해보다 2.7배 늘려 20만6,000마리분이 공급된다. 광견병 예방약은 발생이 잦은 경기·강원 등 휴전선 인접지역에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방역기기 지원 확대=이동식 차량 소독장비가 가축위생시험소 본소뿐 아니라 지소까지 확대 보급된다.

이동식 차량 소독장비는 지난해 전국 9개도 본소에만 90기를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국비와 지방비 26억여원을 투입, 35개 지소에 175기를 추가 공급한다.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및 공·개업 수의사 등 방역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시술비를 지원해 예방약 공급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민·관 방역활동 구분=예방약 공급과 살처분보상금 지급 등 국비와 지방비로 시행되는 가축방역 사업은 시·도·군 등 관련 지자체와 가축위생시험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맡는다.

또 농장채혈 및 양축농가 방역교육 등 촉발기금, 지방비 및 농가·단체 부담으로 시행되는 질병근절대책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농협중앙회 등이 추진하는 등 재원별로 구분한다

발체: 농민신문